

“여론 상승세, 아직 부족” vs “대립각, 별로 개의치 않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2대 총선 격전지

인천 계양을

‘작전서운동’ 포함 확정안 제안에 국민의힘 “진보 지지세 높아 불리” 원희룡, 대립각·선명성 총력 집중 이재명, 양평 고속도로 현장 방문 당 대표 업무 중에도 구민들과 만남

‘명룡대전’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별칭이다. 벌써부터 ‘명룡대전’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인천 계양을은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계산동과 계양동으로 이뤄진 선거구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 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계양갑이 인구 하한에 미달함에 따라 계양을에 있던 ‘계산1·3동’으로 보내고, 계양갑에 있던 ‘작전서운동’을 계양을로 가져오는 확정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소폭의 조정이 생겼다.

확정안 처리를 받아들이는 후보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힘 측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작전서운동이 계양을로 편입된 것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작전서운동



원희룡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왼쪽)가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 앞에서 열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득표율은 52.33%였고, 계산1·3동에선 50.79%였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선 박남춘 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50.32%를 득표했고, 계산1·3동에선 50.79%를 득표해 오히려 계산1·3동이 소폭 더 지지를 얻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 후보를 7.21% 격차로 이겼음에도 계양구는 50.37%가 넘는 지지를 박 후보에게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세가 강한 선거구다.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곳으로 유명하며 최근 5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게 내준 적이 단 한번 밖에 없는 곳이다.

◆지역에 스며드는 원희룡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에서 협지 중

에 협지로 꼽히는 계양을에서 역전 드라마를 꿈꾼다. 원 전 장관이 이 대표를 잡으면 단순히 여권의 대권 주자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이 아직 연고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을 만나며 계양을에 스며드는 중이다.

원 전 장관은 지역에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오전 찾은 사무실에서 원 전 장관은 지역 내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자리를 갖고 있었다. 원 전 장관은 “몸과 마음을 다 맞춰서 앞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지역 발전과 나라를 바로 잡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호소했다.

원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최근 나타나는 여론조사 상승세에 대해 최대한 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 앞에서 열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관적으로 다가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흐름은 나타나는데,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사무실 앞에서 만난 인천 시민 오광용씨는 “인천에 이렇게 중량감 있는 여당 인사가 온 적이 별로 없다”며 “원 전 장관 같은 능력 있는 인사가 지역에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중앙당 업무에도 지역 찾는 이재명

시골벽적인 원 전 장관의 사무실과는 달리 이재명 국회의원의 사무실은 조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교롭게도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이슈화시키기 위해 현장 방문을 했다.

이 대표는 계양을에 단수공천을 받았지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

다.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중앙당 업무가 바빠지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뒤로 미뤘고 아직 선거사무소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는 바쁜 당대표 업무 중에도 지역을 찾으면서 구민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사무실 관계자는 “당 대표 업무가 너무 바빠서 지역 상주하지는 못하신다”며 “그래도 어제도 작전서운동 주민들도 만나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구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이 대표와 각을 세우려는 것에 대해 “그 쪽에서는 대립각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본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키맨’의 등장

원 전 장관 사무실과 이재명 대표 지역 사무실 중간 쯤에 유동규 자유통합당 계양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그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등 이 대표와 각을 세웠다. 유 예비후보의 출마가 실제 당선되려고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떨어트리려고 나온 것인지 묻자, 사무실 관계자는 “둘 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측은 유 예비후보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다. 이 대표 측은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원 전 장관 측은 “거기 신경 쓸 시간이 아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

이재명, SK하이닉스 방문·정책간담회 동부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 확대와 시스템 반도체·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 남·동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K하이닉스 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기해 민주당의 반도체 공약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경기 남부(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와 동부(용인·광주·여주·이천)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만들고 경기 동부권의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패키징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하나의 패키지에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융합된 것) 최첨단 메모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예정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이외에도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속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

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의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다.

민주당은 글로벌 패키징 육성, 첨단 패키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랩(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

비타당성조사 신속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민생토론회, 선거용 아냐 925兆 퍼주기? 사실 왜곡”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엄연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야권 지지체장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정당)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민주당 탈당파 “민주연대 결성 추진”

(홍영표·설훈·박영순·김종민 의원)

尹·李 방탄청산에 힘 모을 것

민주당 탈당파인 홍영표·설훈·박영순·김종민 의원이 “진짜 민주세력, 정치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탄정치를 근본적으로 청산해내겠다”며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당 대표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국회를 다양성

국회로,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꿔내겠다”면서 “진짜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의 정신, 다당제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재명 대표 방탄청산을 바라는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연대’의 당명을 새로운

미래로 할지 아니면 ‘민주’가 들어가는 새로운 당명으로 바꿀 것인지 속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추가 합류 가능성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긴 그렇다. 이번주 내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새로미래에 입당하는 형식이나 물음엔 “지금 형태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미래에 적을 두고 개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